민주 '거물 트리오' 재보선 진두지휘

손학규·김근태·문재인 선대위장 임명
'이명박 정부 중간 평가' 유권자에 각인

민주당이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명의 거물 선거대책위원장을 내세우는 한편 지역 대표성을 가진 원내외 인사들을 총동원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5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최소한 2승, 많게는 3승 이상의 결과를 거둔다는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에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의원, 문재인 변호사를 각각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한때 해당 지역의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들이 각 지역구를 발로 뛰면서 지지를 호소한다면 '민주당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선대위원장들은 지역구에서 명망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원내외 인사들과 함께 뛰면서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우선 손학규 전 대표는 당내 경기지사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함께 수원 장안의 표심을 공략한다.

당내에서는 손 전 대표가 지역을 발로 뛰고 김 의원 등 수도권 원내외 인사들이 가세한다면 수원 장안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야를 대표하는 김근태 전 의원은 당내 개혁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함께 안산 상록을 지역을 공략한다.

대표적인 재야출신 정치인인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소수 야당의 지원 속에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안희정 최고위원과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등과 함께 경남 양산 지역을 공략한다.

민주당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 전 비서실장과 안 최고위원, 김 전 행자부장관 등 친노 인사가 총출동함에 따라 다시 '노풍'이 불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거물급 선대위원장 체제를 내세운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자체 규정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반(反) MB 연대'라는 기치를 내걸어 승리한다면 범민주세력의 통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강원 강릉에는 이광재 의원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는 홍재형 의원을 각각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에서 정세균,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재보선 공천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릉 홍준일, 양산 송인배, 수원장안 이찬열 후보, 정세균 대표, 증평·진천·괴산·음성 정범구, 안산 상록을 김영환 후보, 이강래 원내대표. /연합뉴스

■ 국감 브리핑

"실업자수 310만명 … 정부 고용통계 허상"

강운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7일 "국내 실업자 수가 정부의 공식통계치인 90만5천명보다 훨씬 많은 310만명에 이른다"며 "이는 정부 고용통계의 허상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에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 8월말 정부의 공식통계치인 90만5천명에 취업준비생 64만4천명, 구직단념자 17만8천명, '쉬었음' 인구 145만2천명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수는 317만9천명으로 실업률이 13.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4대강사업 가스배관 이설비 포함 안돼"

주승용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이날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배관 5곳 4.8km을 이설 또는 보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257억원은 4대강 예산에도 포함 안됐다"며 "이 비용을 천연가스 공급비용으로 포함할 것이고 이는 곧 공급원가에 반영돼 결국 도시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4대강 사업 비용 일부를 국민 전체의 세금도 아닌 일부 천연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질타했다.

"통신사업자 343만명 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서갑원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이날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은 343만여명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35.6%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제공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국민도 모르는 사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업자 판매비 상한 방치 방통위 직무유기"

조영택 의원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이 2001년 2조3천69억원에서 지난해 5조8천895억원으로 155% 증가했다"며 "고시 규정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유기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연차 진술, 검찰이 다듬고 만든 것"

이대통령에 수사팀 교체 요구도

노 전 대통령 비망록 공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방식을 질타하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가 참모진의 만류로 보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4월19일자 편지와 함께 5월 초 검찰의 추가소환에 대비해 작성한 '추가진술 준비'라는 미완의 개인 메모 등 2개의 미공개 기록, 서거 직전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한 심경 등을 담은 '내 마음속 대통령-노무현, 서거와 추모의 기록1'을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지금 수사팀의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권의 행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라며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출석 후 5월 초 작성하다가 중단한 '추가진술 준비'라는 글을 통해선 "검찰은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은 검찰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한 뒤 "결정적 증거라고 보도되고 있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나는 검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진술을 유도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재판에서 이 과정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이통3사에 250억 기금 요구 압력"

■ 국감 이슈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미디어법과 노동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 교과위 국감에서는 나로호 발사 일부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정운찬 총리의 교수 시절 민간연구소 고문 겸직 논란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문방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유효성 논란으로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은 법이 유효하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법이 통과됐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심사위원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 경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돼 오히려 불법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문방위 국감에선 특히 청와대가 IPTV 활성화를 위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이동통신 3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전 언론특보가 회장으로 있는 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면서 "IPTV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민간회사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는 나로호 발사를 둘러싼 책임 추궁과 더불어 향후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여야는 모두 러시아와의 기술 계약 배경과 기술 종속 문제, 한국형 독자 발사체 개발 가능성 등을 따졌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또 정운찬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민간연구소 고문 겸직 논란과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 문제로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등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인 노동관계법 시행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영세사업장은 대기업보다 경영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300인 이하 사업장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은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